

# “부산 땅 40배 차익 매각 투기 아닌가”

###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 전관예우 등 추궁...“죄송... 아니다” 해명 진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의혹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통합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부산 세송동 땅을 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했는데 거주한 적도 없고 23배의 차익, 실거래가로 4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거주 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한 뒤, “당시 서울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샀는데 차익이 생겼고 장인이었던 ‘돈을 맡겨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매입한 김해 삼정동 대지와 관련,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만 해도 돈이 있으면 땅에 물어두려는 정서가 있지 않았느냐”며 투기가 아닌 투자 차익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가 공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고액의 급여를 놓고 ‘전관예우’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5억4천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민에 비해 많이 받은 편이지만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부인을 동반해 남미 출장을 갔으며 비용이 4000만원 가까이 소요, 황제성 외유였다”고 고백했다. 정 후보자는 “집사람이 공무에 참여를 안 하면서 같이 간 것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법조인인 정 후보자의 아들에게 외삼촌과 이모가 4년간 4억7000만원을 증여했다”면서 “정 후보자는 예금이 10억원 가까이 있는 데도 처남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증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와 이모, 외삼촌 등이 아들의 아파트 분양 잔금을 치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지난 2001년 11월 수백만원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과 관련, “제 아기가 병으로 군대를 못 가게 돼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신변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 등에 해명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과 부모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병역 기피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증여와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통합당 대선 평가위원회는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지역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대선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주, DJ 벤치마킹해야”

### ‘행동하는 양심’ 토론회서 제기

민주당통합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되살아나려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김한정 상임이사는 2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 정신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토론회에서 “혁신가이자 벤처정치가인 김대중은 편향을 경계하고 중산층에 기반을 둔 유연한 개혁주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상임이사

는 “정책정당, 여성 엘리트 중용, 남북 평화 공존론 등이 모두 김대중의 특색”이라며 “그는 조금씩 개혁적 시장주의를 피하고 원칙은 고수하되 타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자인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는 민주당의 대선패배와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모두 합종연횡과 메가 공약으로 성공했다”며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합종연횡과 메가 공약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대선패배 원인은 제과·전략부재

### 대선평가위, 광주·전남 간담회

민주당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21일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18대 대선과 관련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을 12개 권역별로 나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평가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서 광주지역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인 등으로부터 대선 패배의 원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선평가위 간사인 김재홍 교수는 “이번 대선 평가 작업은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며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대선 평가의 정치적 책임소재를 거두고 다시는 이런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교훈을 삼을 것”이라며 지역의 거침없는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승훈 전남대 5·18연구교수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의 키워드는 ‘제과’였다”며 “후보 선출과 선거전략 등이 계과 중심의 시각과 논리로 진행되고, 컨셉틀 타위가 없어 국민이 바라는 것과 맞지 않은 게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근 조순대 교수는 여전히 지역적 연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와 맞춤형 정책공약 부재 등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안경환 광주 YMCA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민생 정책보다는 이념적으로 접근했지만 새누리당은 실용·실리로 접근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선거 승리를 낙관한 나머지 너무 안일하게 선거 운동을 하는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올인’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어 전남도당에서 열린 전남지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선 전략 부재, 중앙선대위와 지역 선대위의 소

통 부재,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 소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올인’ 등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또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기득권 싸움만 벌이는 대정신이 없었고, 선거 패배의 책임 세력들이 향후 당내 혁신을 주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선평가위 김재홍 교수는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가혹할 정도로 엄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오는 5월4일 열린 정기전당대회에서 대선평가 결과물을 의안으로 삼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평가 라운지

### 김승남 “중·어선 불법담보금, 어업인에 써야”

민주당통합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등 외국 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을 어업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연간 1만3000~1만8000척으로 추계되고 있고, 2006년부터 작년 까지 6년 동안 총 2809건의 불법조업이 해경에 단속됐다”며 “중

국 어선으로 부터 받는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돼 어업인들에게 쓰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수된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수산법등을 개정하여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농식품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전정배 “모든 선출직, 전당원 투표제 도입을”

민주당통합당 전정배 전 의원은 21일 새 지도부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전(全) 당원 투표제’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당의 모든 기득권 및 계파구조를 청산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상형식 당내 민주주의를 전면 실행해야 한다”며 “그 바쁜길에 전 당원 투표제의 실시”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도부 선출은 물론 모든 선출직 당직에 대해 도입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일반국민 투표는 배제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을 ‘입당 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는 편의적 수단일 뿐이며, 당직 선출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 당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전 당원 투표로 지역위원장도 뽑히게 되면 계파 간 싸움과 야합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盧 NLL 양보”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렵다”

### 檢, 모두 무혐의 처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NLL과 관련한 남북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 의원 등 고·고발된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 존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한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통합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편파조사”라며 반발했다. 박병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철저하지 않다는 지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고(故)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의 관련자 진술과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에 나온 보고서”라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전문증거의 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2타경 27047	1	담양군 용면 두창리 1039-12 1511㎡ [공유] 지구대경지분4분의1전부	담	6,044,000 6,0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28842	1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224-3 2629㎡ [공유] 지분순자산지분27분의3및동해동원, 최인영, 최원영, 최원영지분27분의2전부	담	9,639,630 9,639,63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29487	1	나주시 공산면 곡리리 626 414㎡ [물건번호 1:채시외건물매각채외, 매각외건물을위하여 법정지상권설정여지있음]	대	7,560,000 7,560,000	일괄매각, 목록2도문계책시실지속[소로2부]
	2	동소 628-9 ㎡	대	8,642,000	
	3	동소 319-11 298㎡ [현황:도로]	임야	8,642,000	
		동소 319-12 198㎡ [현황:전]	임야	3,960,000	행차임
				3,960,000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12타경 14812	1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98, 401동 2층 16호 [현황상:무등4차아파트] 34,7395㎡ [평가가격에는대지권가격이포함되어있으나 대지권비대지권분리가능]	근린시설	28,000,000	임차인있음
2012타경 28965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방동대로800번길72, 1층 109호 [월세용, 대성트윈스밸리]	근린시설	630,000,000	일괄매각, 임차인있음
		동소 72, 1층 110호 [월세용, 대성트윈스밸리]	근린시설	630,000,000	
		동소 110, 3층 11호 [월세용, 대성트윈스밸리]	근린시설	630,000,000	
<b>[기타]</b>					
2012타경 10612	1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324-10 142㎡ 전 동소 324-11 3110㎡ 채시외 수목 1식 전 동소 324-19 71㎡ 전 동소 324-28 3436㎡ 채시외 수목 1식 전 동소 324-11 843.9㎡ 부속건물 주택, 관리사 [현황상:창고및임업장]49.6㎡ [실측면적64.4㎡] 퇴비사94.5㎡ 307.44㎡ 채시외 창고 등 192.8㎡ 동소 324-11 1호 843.9㎡	계사	212,371,800 212,371,8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목록1-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포함
2012타경 20527	1	장성군 동하면 구림리 200 3833㎡ 전 동소 200 1층1342.2㎡ 2층50㎡ [현황:열실명] 부속건물 사무실21.6㎡ 변소2㎡ [현황:열실명] 채시외 보일러실 등 2023.2㎡	공장용지	1,263,747,060 1,263,747,06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기계기구목록전부소재물명명, 공장및공동주택등법제6조제외의한기계기구목록은별지 기재할음
2012타경 21346 [중복]	1	동소 200-16 540㎡ 화장실6.72㎡ [현황:열실명] 기계실12.6㎡ 29.7㎡ 사유정말의실 31.35㎡ 공장146.03㎡ 부속건물 사무실및 식당151.84㎡ 창고 1층928.52㎡ 2층930.16㎡ 창고80.5㎡ [실측면적106.70㎡] 채시외 창고 등 1587.4㎡ 동소 200-20 774㎡	공장용지	1,263,747,06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임차인있음
2012타경 25270	1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81-6 241㎡ 대 동소 81-6 1층116.73㎡ 2층82.70㎡ 부속건물 변소1.62㎡ 채시외 창고 등 83㎡	대	160,803,280 160,803,28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임차인있음

● 공고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법원경매 부동산의 경매를 집행함에 있어 최고기대수익인인 매각가격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의무로 부과하여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부담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수사 당국에 반환한다.  
 2. 매각기일 : 2013. 3. 8. [로]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3. 15. [로]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입양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회(1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기부포 또는 현금 등 준비하여 매각에 필요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받는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과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에서 투입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최고기대수익인인 입찰가격을 입력하고, 최종기대수익인인 입찰가격을 입력하고, 최고기대수익인인 입찰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기대수익인인 최저기대수익인인 제외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방에서 종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기대수익인인 입찰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된 대금지급금까지 매각허가금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의 확정 및 납부기간을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 지서를 입찰방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입찰보증금 기탁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용기를 확정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 및 지대, 비용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효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대,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인도 기입증서 작성 후 매각허가금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 지서를 입찰방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입찰보증금 기탁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용기를 확정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대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2주 후 주택등기신청을 하고 매각이 이루어지는 일주일 이내, 사법절차 종료후 1주일 이내에 매각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신청을 하면 매각이 정지된다. 정지신청을 하면 매각이 정지된다. 정지신청을 하면 매각이 정지된다.  
 ②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대,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인도 기입증서 작성 후 매각허가금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 지서를 입찰방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입찰보증금 기탁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용기를 확정하여 준다.  
 ③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④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⑤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⑥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⑦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⑧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⑨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⑩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원서 기재에 따라 매각이 실시된다.

2013. 2.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영훈**